



공무원 외부강의등 신고여부 특정감사결과 보고



감 사 실

공무원 외부강의 등 신고여부 특정감사 결과 보고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거 우리구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 적정신고 여부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보고임.

[감사실-3716(2017.6.20.)호와 관련]

I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I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7. 10. ~ 7. 21.(10일간)
 - ※ 사전자료수집(관련기관 자료요청) : 2017. 6. 26. ~ 7. 7.(10일간)
- 대 상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전 공무원
- 조 사 반 : 청렴감사팀장 외 1명
- 범 위 : 2016.7.1. ~ 2017.6.30. 기간중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전
- 내 용
 - 외부강의등 대가기준 초과 수령 여부
 - 신고대상 외부강의 등 신고사항 이행 실태
 - 지나친 외부강의 등으로 직무수행 소홀 여부 점검 등
 - 외부강의 요청 기관(단체)에 대한 우리구 공무원 실시사항 조희로 신고누락 방지

Ⅲ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 총 평

-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의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은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라 직원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 매년 지속적인 홍보 및 감사 실시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온 결과, 일부 신고 지연 및 추가신고 누락사항은 발생하였으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전신고 이행에 적정을 기하였음.
-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규정 미숙지 등으로 직무관련 외부회의 등에 참석하고 사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주의를 촉구하고 향후 신고절차 수시 공지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코자 함.
- 2016. 9. 28. 청탁금지법 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2017. 2. 7.자로 전부 개정하여, 외부강의등은 대가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사례금 상한액을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추어 직급별로 상향 조정하였음.
-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는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만 신고를 의무화하여 대가를 받지 않는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의무 인식 부족으로 신고누락이 우려되므로, 향후 대가여부에 관계없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 홍보 강화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코자 함.

□ 외부강의등 신고 및 검직허가 현황

(단위 : 인원/건수)

구 분	계	학 교 의 강 의	협회(단체) 강의 등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기 타 회의 등	비 고
기 신 고	21 / 43	6 / 5	7 / 14	3 / 4	10 / 20	
일 부 누 락	1 / 1	1 / 1	-	-	-	
신 고 제 외 대 상 신 고	6 / 8	2 / 3	-	-	4 / 5	국가·지자체 국공립학교
계	23 / 52	7 / 9	7 / 14	3 / 4	11 / 25	

※ 일괄신고건은 1건으로 산정

□ 주요 사례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 신고 누락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3항, 제4항]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대다수 직원이 인지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지연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함.

▷ 조치계획

- 검직허가자를 포함한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에 대해 사전신고 누락 및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관리하고 향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 청탁금지법 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신고대상이므로 이를 엄격히 관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홍보 및 교육등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

고액사례금 수령 여부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별표2)

(단위: 천원)

구 분	구청장	4급 이상	5급이하	비 고
상한액	300	300	200	강의등 1시간 기고 1건
최대(1시간 초과시)	450	450	300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청기관으로부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수준으로 수령 가능.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6항]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위 대가기준은 외부강의등 상한액으로 2017.2.7. 우리구 행동강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춰 직급별 상한액을 조정하였음. 대상기간중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총 23명 50건 12,250천원으로 기준초과 내역은 없음.

▷ 조치계획

- 대상기관(단체)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 지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사례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지나친 외부강의등으로 직무수행소홀 여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P.55~56 / 겸직관련, 외부강의)]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공무원의 담당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에만 허용하고 근무 시간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함.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출강하여야 하고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하며 결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 공문서에 근거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9항]


공무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근무시간내 외부강의 참석자는 담당직무와 수행 관련한 경우에만 실시하였고 기타 근무시간 외 활용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직무수행 소홀사항은 없음.
-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3건이 있으나 불가피한 직무관련 외부강의 수행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구청장 미승인건이 1건 있음.

▷ 조치사항

- 부서장은 외부기관(단체) 강의 등 요청시 관련공문 검토로 직무수행 소홀사항이 없도록 참석여부를 신중하게 결정  사전신고시 요청기관 공문 반드시 첨부
- 외부강의등 횟수를 월 3회로 제한하고 직무상 불가피할 경우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지속 관리 강화

외부강의등의 범위

- ☑ 공무원이 직무관련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등  단,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 제외
-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등을 전달하는 형태
- ☑ 직무와 무관한 강의 등의 경우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아님.